

경사노위 불참해야 한다

관련 기사 4~5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

4~5면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밝히는 경사노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

8면

고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문재인 정부, 말로만 위로하고
정규직화 포함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는다

8면

양승태 비리 등
민주당의 부패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2면

프랑스를 뒤흔든
노란 조끼 운동 10주

6~7면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에서 패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그 후 야당들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상징적인 행보다. 메이가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을 회담 상대에서 배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메이는 2016년 11월에 자신이 정한 “레드 라인”[한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즉, 브렉시트 후 영국은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모두 탈퇴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주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은 2018년 11월 합의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안만 낼 것이다. 영국녹색당 하원의원 캐틀라인 루카스는 메이와의 대화 이후 이렇게 말했다. “메이는 자기가 정한 한계선 때문에 자승자박인 상황이에요.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메이는 지금까지도 보수당 우파와 [북아일랜드 우파 정당이자 연정 파트너인] 영연방병합당(DUP)의 지지를 얻으려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것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1월 16일 코빈이 발의한 정부 불신임 투표에서 메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연방병합당 덕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연방병합당은, 유럽연합이 애써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시킨 ‘안전장치’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그 ‘안전장치’인즉슨, 북아일랜드를 관세동맹에 잔류시켜야만 남-북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개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영연방병합당으로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

1998년 아일랜드공화국군(IRA)과 영국 사이의 평화협정[벨파스트협정]이 존속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안전장치’ 마련이 정당화됐다. 그러나 남-북 아일랜드 간 국경을 개방할 방법이 그것 뿐인 것은 아니다. 1922년 아일랜드 남부가 자치권을 획득한 이래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공동여행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는 1965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보강되기도 했다.

국경 개방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샌부가 공동여행구역 조항이 재가동될 수 없는 이유로 드는 것은 이렇다. “유럽연합은 국경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즉 ‘안전장치’는 유럽연합이 제국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기구로서 국경 경비에 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남-북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계속 개방하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일랜드인들이 국민투표를 해 남-북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통일 아일랜드공화국을 수립하면 된다.

비현실적 한계선을 내세운다고 비난받는 것은 코빈도 마찬가지다. 그 한계선이란 코빈이 17일에 헤이스팅스에서 했던 이런 연설로 요약된다. “우리[영국]의 대안은 향후 무역 협정에서 항구적 관세동맹 문제에 관해 영국이 발언권을 갖는 것에 기초해 있다. 강력한 단일시장 관계, 노동권·환경 규제·소비자 권리 등에서 최소한 유럽연합 수준을 유지한다는 약속이 그런 것들이다.”

전자는 터무니없는 조건은 아니다. 현재 스위스는 유럽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별도의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상태다.(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번번이 판죽을 걸지만 말이다.) 코빈 안의 문제점은, 코빈이 추진하려는 대안적인 경제 정책을 좌절시키고자 유럽연합이(특히 수입 통제를 두고) 영국에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빈에게도 대응책이 있다. 메이처럼 코빈도 브렉시트 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노동자들이 영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원칙적 측면에서 재앙적 실수다.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면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자 300만 명 이상의 권리가 위협받게 되고, 그러면 노동계급 전체가 분열해 힘이 약해진다. 이민자가 “문젯거리”라는 주장에 뒷문을 열어 주는 효과도 있다.

전술적으로도 실수다. 코빈이 이주의 자유 옹호라는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면 좌파적 입장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뻗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들 중 다수는 옹계도 영국에 사는 유럽 대륙 출신자들이 꺾박받는 것에 분노한다.

[코빈이] 이주의 자유를 옹호하면, [이후]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할 때 악질적인 메이의 보수당 정부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것이다. 심지어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영국의 협상력을 키워줄 수도 있다. 반면 이주의 자유 제한을 내걸면 여러 선택지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다.

노동당이 이주의 자유 옹호 입장을 취하면 정치적으로도 큰 반향이 있을 것이다. 메이가 수렁에 빠진 지금, [조기] 총선이 시행돼 코빈이 영국의 우전대를 잡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38호 / 번역 김준호



수렁에 빠진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영국은 어디로?

토머스 텅글라-에반스

1월 21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메이는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메이는 모든 결정을 보류해서라도 무너져 내리는 정부의 수명을 연장하려 애들바당하고 있다.

1월 15일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은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로 참패했다. 영국 하원 역사상 정부가 발의한 안건이 이토록 큰 표차로 패한 적은 없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이 하원에 부친 정부 불신임 투표가 306표 대 325표로 부결돼서 메이 정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합의안 부결 뒤, 메이는 사흘 안에 ‘플랜 B’를 하원에 제출해야 했다.

메이가 제출한 ‘플랜 B’는 ‘플랜 A[15일에 부결된 합의안]’와 거의 똑같은 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이가 있다면 하원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플랜 B를 “의미 있는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애들바당

메이는 1월 29일에 [‘플랜 B’] 의회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중립적 안건”으로 표결에 부치려 한다.

즉, 하원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고 표결하지만 그 표결에 구속력은 없을 거라는 뜻이다.

메이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합의안을 수정해 달라고 애걸하려고 한다. 메이는 2월에는 “의미 있는 표결”에 부칠 만한 건덕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기존 합의안에서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임을 이

미 분명히 했다.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들은 합의안에 수정 조항을 덧붙이라고 퍼부어댔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한 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보수당의 분열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내무장관 앰버 러드는, ‘노 딜 브렉시트’[합의안 없는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수정안에 대해 보수당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면 장관 여럿이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보수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 지침을 내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메이는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처지다. 총리 사퇴 압박이나 보수당 내부 성향 하원 평의원들의 반란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보수당은 대기업의 요구와 [우파적] 편견 사이에서 분열하고 있다.

금융권과 대기업들은 영국이 유럽 단일시장에 잔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야 그들의 부와 특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전문을 보시오.)

한편, 보수당은 우파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종차별과 민족주의에 기대려 하고 있다.

의회에서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에 수백만 대중은 짜증나 있다. 그러나 노동당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보수당에 맞선 시위를 호소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노동계급 대중은 구경꾼 노릇이나 하게끔 방치될 위험이 있다.

마비

노동당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내부 분열로 인한 마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부정직하게도 “민중의 투표”라고 포장된) 2차 국민투표 여부를 묻는 표결을 하원에 부칠 수 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브렉시트 장관 키어 스타머는 당의 정책을 거슬러 2차 국민투표 발의를 공공연히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2차 국민투표는 위험하고, 분열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민중의 투표” 발의 캠페인을 주도하는 대기업들과 블레어주의자들은 노동계급 대중이 직면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해법도 제시하지 않는다.

현 사태에서 최선의 대응책은 투쟁을 확대하고, 조기 총선을 밀어부치고, 긴축 지향·인종차별적인 보수당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다.

부자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닌 노동자와 이주민을 위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투쟁도 있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38호 / 번역 김준호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용어설명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유럽단일시장은 관세나 제한 없이 재화·서비스·사람의 이동을 허락하는 구역으로, 노르웨이 등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단일시장에는 참여하고 있다.

관세동맹은 유럽연합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붙는 관세에 대한 동맹으로, 회원국 한 곳에서 관세를 물면 동맹 내부에서는 별도의 관세 없이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다. 터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관세동맹에 속해 있다.

새로 나온 책

브렉시트, 무엇이고 왜 세계적 쟁점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지음, 김영익·김준호 엮음, 책갈피, 156쪽, 6,500원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던 거구나!

김문성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현·노철래(전 의원) 등의 재판 청탁 건이 포함됐다.

이로써 양승태 치하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체가 더 분명해졌다. 법원의 위상과 권력 강화를 위해 법원이 조직적으로 입법 로비를 한 집단 범죄 행위인 것이다. 재판이 거래 대상이었다.

그동안 이 사건은 흔히 박근혜 정부가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자성을 파괴한 권력 농단 범죄의 일부로만 여겨졌다.

물론 박근혜 처지에선 그렇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 양승태가 그와 호흡을 맞추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각별히 우파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지가 줄곧 주장해 왔듯이, 사법농단은 법원 자체의 권력 강화를 위해 재판(대부분 우익적인 판결)을 거래 수단 삼아 권력 기관 내 로비를 한 범죄다.

법원의 최고위 인사들은 국가기관과 지배계급 안에서 법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장관급 판사 자리를 늘리는 상고 법원 설립을 추진했다. 양승태는 대법원장의 권력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한다. 당시 여당 설득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의 거래와 개별 거래를 통해,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찬성론의 주요 거점이



이 자를 구속하라 서민층을 우롱하고 박해하는 판결을 거래한 이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집중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계급적 특권을 유지해 주는 우파적 판결을 주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임종헌은 이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 이번에 밝혀진 인물들도 모두 국회 로비에 필요한 인물들이었다.

민주당 서영교, 한국당 노철래는 19대 국회에서 법원·검찰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전병헌과

이군현은 로비 당시 각각 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과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던 3선 중진 의원이었다. 전병헌은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청와대의 대 국회 업무를 주도)을 맡을 정도로 민주당 내 친문 실력자였다.

서영교와 전병헌의 청탁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임종헌은 직접 해당 재판이 열린 법원장에게 연락을 했고 이는 재판부에게 전달됐다.

한편, 임종헌은 당시 법사위 소속으로 상고 법원에 반대하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재판에도 관여했다. 서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다 밀려난 판사 출신으로 결국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났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다시 한 번 분명해지면서, 왜 지난해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하의 대법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모

두 사법 적폐 척결에 소홀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됐다.

검찰·법원 모두 여러 명목으로 국회에 검사와 판사를 파견해 주류 정치권 동향 파악과 상호간 청탁의 거래 루트로 삼아 왔다. 청탁을 하는 서영교가 도리어 판사를 자기 방으로 부른 것이나, 로비를 하러 온 임종헌에게 오히려 전병헌이 청탁을 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일상적 관행

최근 한국당은 손혜원이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중·고교 동창이라며 “초권력형 스캔들”이라고 공세를 편다. 그러나 이와 재판 거래 문제를 비교하면, 거의 용단 폭격과 딱총 경고 사격 수준이다.

그런데도 공세의 수준이 이토록 다른 것은 지배계급 네트워크에 만연한 관행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양승태 치하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일부 개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지배계급 내 뿌리 깊은 유착 관행이 예외적으로 일부 폭로된 사건인 것이다.

삼권 분립 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강화가 노동자와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이 거의 확실한 듯한 상황에서 가진 자들의 사법농단과 굳어진 관행은 서민층 사람들에게 절망만 더해줄 뿐이다.

재판 거래가 일상적 관행이라 함은, 달리 말하면, 가끔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는 게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예외는 노동자와 천대받는 사람들의 대규모 저항으로 형성된 유리한 세력균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사법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조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았다.

민주당은 “진보”를 자처해 왔다. 언론들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을 “진보 vs. 보수”로 보도해 왔다. 박근혜가 민주주의를 욕되게 했다면, 민주당은 진보를 끌고러온 단어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진보로 불리려면 적어도 버니 샌더스처럼 서민의 편에서 부의 재분배(부자 증세 등)를 통한 복지 확대 등 반특권 기치를 내걸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친기업 행보를

한다. 민주당도 오랜 특권형 관계망의 일부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영교는 측근 아들의 반복된 ‘바바리맨 범죄’의 형량을 낮춰 주려고 ‘당당하게’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 박근혜 정권 때였다. 이때도 이미 민주당은 박해받는 “진보” 야당이 아니라(한국당보다는 못해도) 권력의 일부를 향유하는 자본가들의 정치 세력이었던 것이다.

비록 법원의 로비 대상(감의 처지)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긴 했으나 당시 서영교가 운동권 출신 ‘초선’ 의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지배계급 내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서영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춘추관은 일종의 청와대 내 프레스센터임)을 지내는 등 기성 정치(그 관행)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다.

2015년 이미 친문 실력자였던 전병헌이 자신의 동서이자 보좌관의 뇌물

범죄 형량 감형을 청탁한 것도 전형적인 특권 행사였다. 전병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현재 자신이 소속됐던 상임위 소관단체인 e-스포츠협회를 통해 흡소秉 회사들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오만함

SBS의 투기 의혹 제기에도 목포 MBC가 반박할 때만 해도, 투기가 아니라 문화 지구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손혜원의 설명에 일리가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20채가 넘는다. 그리고 해당 지역 통장을 앞세워 구입 가옥을 고르고 다녔던 것이 드러났다. 드러난 진상이 달라졌다.

부동산 단기 차익을 노린 것이든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것이든 나전칠기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든, 이는 부자들의 ‘취향’ 투자이지 그 무엇이 아니다. 손혜원은 그저 자기가 천박한 강남 땅 부자들과 다르다고 강변하는 듯하다. 고상한

투기는 투기가 아니라 문화발전 촉진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서민이 많이나 될까.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자와 그 해명 방식은 친민주당 문화산업계 인사들의 기분 나쁜 오만함을 보여 준다.

이것이 민주당식 “진보”다. 운동권 출신자나 진보적 이미지로 비쳐지는 인물을 영입해 대대적으로 광고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의 부패한 신주류 정치인이 탄생한다. 몇몇 진보 정책 보따리를 흔들며 표 받아 놓고는 정작 필요할 때는 한국당 핑계 대고 보따리도 풀지 않는 자들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진보 정당 와해 공작에 방관적 구경꾼처럼 무임승차했던 민주당이 “진보” 이름을 쓰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다. 그저 진보 염원 대중이 투표 때 갈 곳 없게 만들어 자기들에게 찍게 만들려는 술책!

민주당이 자본가 기반 정당으로서 자기 기반에 헌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김문성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조건부 참여안은 사실상의 불참안이 아니다**

★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 **“영리병원 반대”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 **한국 경제 악화와 문재인 정부**

★ **자일스 자이 옹파론의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트럼프의 ‘넷다운’ 공격 한 달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된다. 애초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면서 불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행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참여를 압박했다. 대의원대회를 앞둔 최근에 청와대가 민주노총 위원장과 접촉해 2월 초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보다.

이 글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노동자들의 조건과 투쟁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답하고자 한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bit.ly/12문12답>)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는 이전 정부들의 노사정위와 다르지 않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추락이나 트럼프의 무역전쟁처럼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세계경제 불안정화 요인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가 경제 위기 시 양보 압박을 목적으로 했던 옛 노사정위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런지 판단이다. 이런 시기에 정부와 사용자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에 왔던 것도 빼앗으면서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를 강요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성장률과 고용 사정이 나빠지자 지난 몇 달 동안 급격하게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타협, 양보, 고충분담”을 공공연하게 촉구해 왔다. 얼마 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아예 내놓고 “양보할 것 없으면 경사노위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양보”요구는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얘기하던 것과 완전히 똑같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노·사·정=노사정위에서 정리하고, 파견근로 법제화 등에 합의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기존 법안을 전부 개정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안 문구가 바뀌고 구조도 변경됐음에도 노동조합들이 제기해 온 핵심

심 불만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조합들은 노사정위가 시한을 정해 놓고 ‘합의’를 압박하는 정부 정책 추진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나 ILO 기본협약 문제 등에서 보듯이, 2월 국회 일정에 맞춰 합의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기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정부와 사용자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에 왔던 것도 빼앗으면서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를 강요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성장률과 고용 사정이 나빠지자 지난 몇 달 동안 급격하게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했다.

또한 경사노위는 여전히 기술여진 운동장이다. 노동조합 대표성은 여전히 약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더라도 본 위원회 18명 중 1명이 될 뿐이다.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대화는 항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했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는 노동자들에게 더한층의 양보가 강요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회적 협약의 출생지인 유럽에서는 지금 그것이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적 개혁을 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이렇게 조언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적 협약 체결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대신 조직이나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방어하는 기본적인 노사관계 업무에 그들의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차라리 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 통해 무엇을 하려 하나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개혁에 노동자들의 협조를 얻으려는 것이다.

첫째,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조건을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광주형 일자리,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 확대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직무급제 도입의 주된 목적은 자동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적용한 직무급(표준임금 모델)은 차별 해소커녕 저임금 고착화를 낳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돼 왔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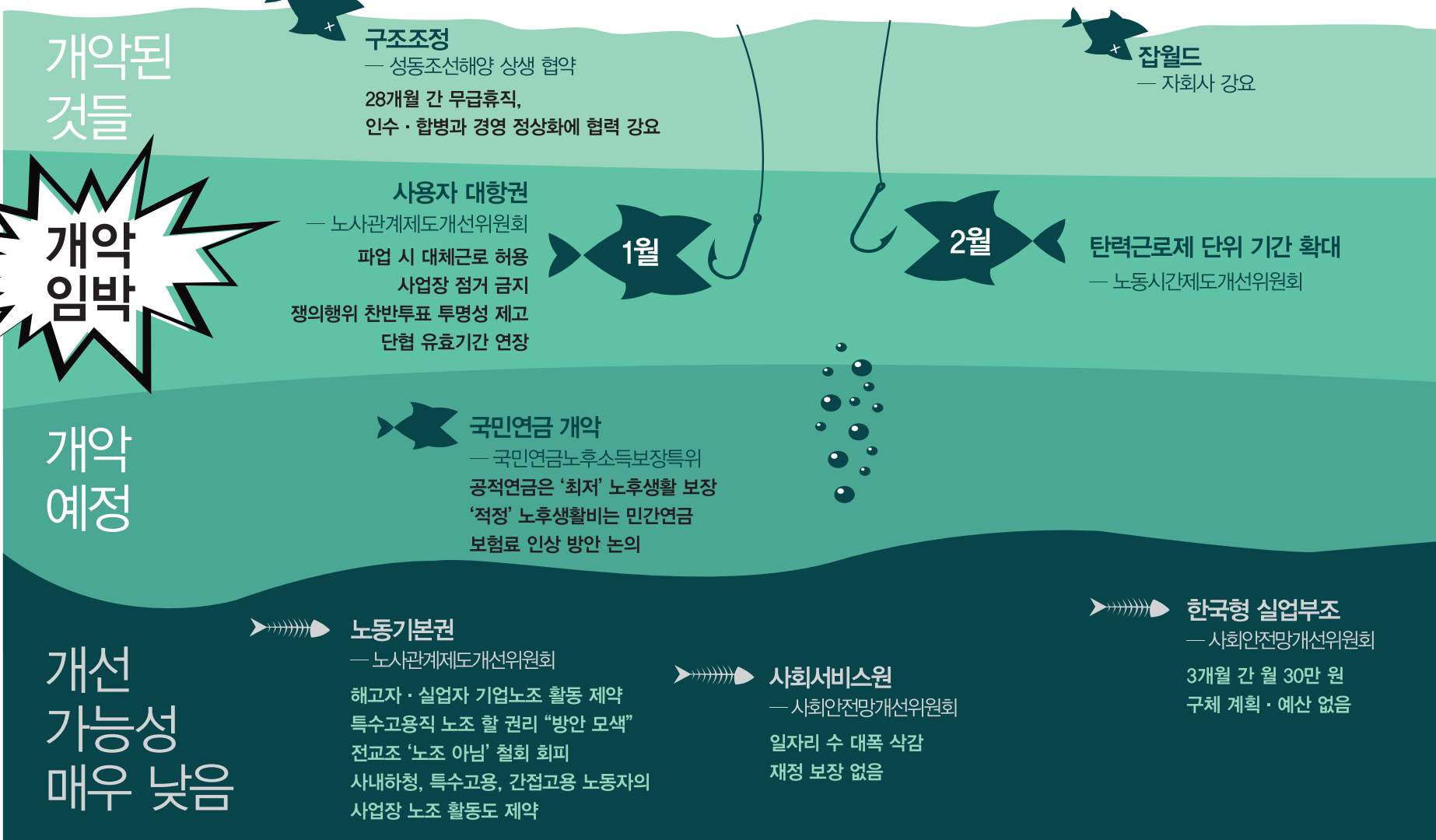
저질 일자리이자 임금 공격 모델이다.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연장선 동시엔, 임금 삭감 공격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 투쟁을 억제하고 계급협조주의를 강화하려 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 공동운명체 정신”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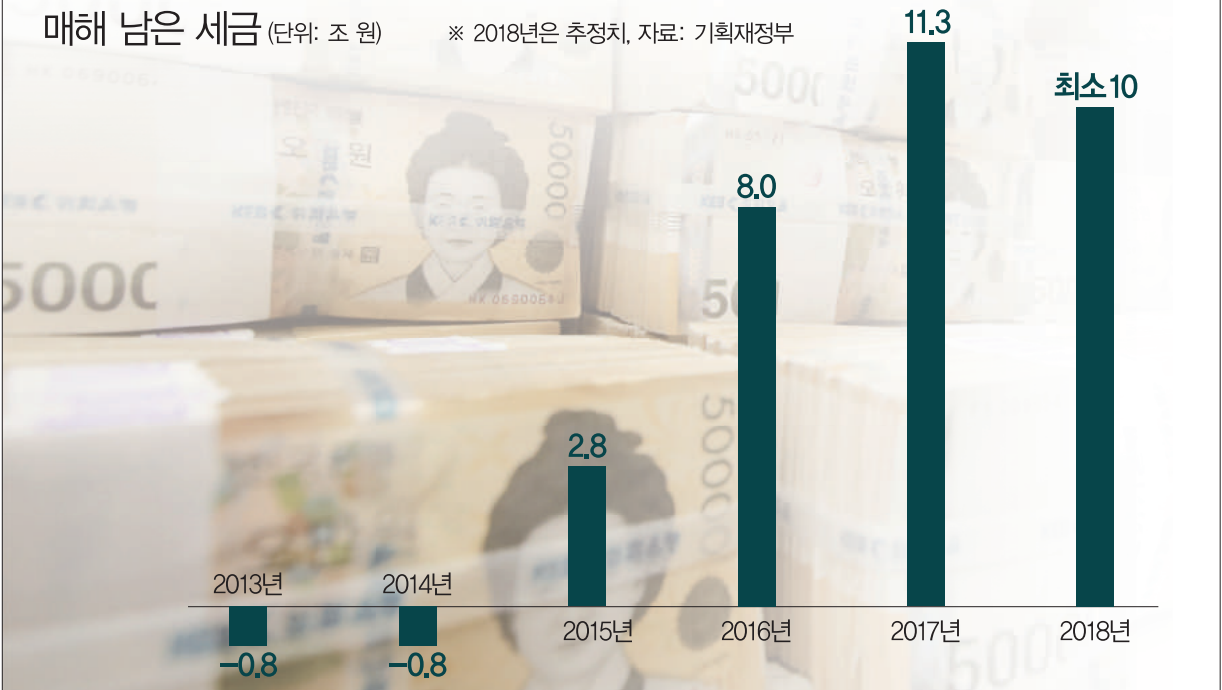
그러나 “노사 공동운명”이라는 말은 노동자들의 일방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곧잘 사용된다. 1998년 노사정위 합의 경험을 봐도, 노·사·정 협조가 노동자들에게 공동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후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파트너십)의 중요한 목적 하나는 “노사 공동운명체 정신”으로 노동자들을 현혹하는 사이에 노동운동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서는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긴축을 해 온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최악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와 친문 인사들, 그리고 사회적 대화 옹호론자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악을 방지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악안을 내놓은 사람들이(애초에 개악을 추진하지 않으면 될 것들) 대화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속 보이는 제안일 뿐이다.

즉, 이런 제안은 민주노총을 ‘담정녀’ 식 결말로 끌고 가거나, 기적해야 할랄한 수정안(희악)을 조금만 수정

하)에 타협하게 만들며, 개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최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개악에 타협하면, 그것은 개악을 정당화해 투쟁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된다. 현장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개악 실행에 맞서 저항할 때 이들은 ‘너희 지도자들이 동의한 것이다’ 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난하고 고립시키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경사노위 바깥에서) 개

악을 방지하는 것과 (경사노위 안에서) 개악에 합의해 주는 것, 두 나쁜 선택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바깥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싸운다면, 친기업·반노동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김명환 집행부는 민주노총이 대안 없이 “반대 또는 저지 투쟁”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이후만 돌아봐도, 투쟁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며 불충분했던 게 문제이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

대화와 투쟁 병행은 관찮지 않나

노동조합은 결국 협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투쟁을 해서 사측이나 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것과, 사측이나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최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더러 투쟁과 교섭을 병행할 생각이라던 차라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 중 상대가 투쟁에 나서면 대화(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투쟁-대화 병행론’은 대화가 결렬되지 않으려면 투쟁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투쟁은 언제든 쉽게 꺼내어 쓸 수 있는 주머니가 아니다. 투쟁=대화 병행론은 대화가 결렬되지 않으려면 투쟁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요컨대 투쟁과 대화의 병행은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십사리 내지 못한다. 지난해 6월 30일 7만 명 규모의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던 것이 그 사례이다. 지금 김명환 집행부가 경사노위 참여 추진에 주력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해야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대변할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호도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가 추진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지옥에 왔다는 것이 최근 통계로 드러났다. (왼쪽 그래프)

다음으로, 업종별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해당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친화형 미래 산업” 창출로 산업정책을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살아나고 과정에서 가능하다.” 이는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라며 기업 지원 방향을 분명히 해 왔다.

일부 노동조합들은 표준임금체계를 포함한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업종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에 참여해서 다른 노조들이나 조합원들이 수긍할 수 없는 합의를 한다

면,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대변하기는커녕 큰 불만과 혼란을 자아낼 것이다.

우선, 사회안전망 개선 문제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안정유연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고용안정(망)’은 실업급여 증액을, 유연모델은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뜻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맞바꾸기인 데다 그조차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 개선이 형편없다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면서 도 지난 2년 동안 실제로는 긴축 정책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 최근 통계로 드러났다. (왼쪽 그래프)

다음으로, 업종별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해당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친화형 미래 산업” 창출로 산업정책을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살아나고 과정에서 가능하다.” 이는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라며 기업 지원 방향을 분명히 해 왔다.

일부 노동조합들은 표준임금체계를 포함한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업종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에 참여해서 다른 노조들이나 조합원들이 수긍할 수 없는 합의를 한다면,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대변하기는커녕 큰 불만과 혼란을 자아낼 것이다.

경사노위 참여 않으면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 떨어질 텐데

민주노총이 전 사회적 관심이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위상이 높아진 경우는 예외 없이 대규모 투쟁으로 진보 여론 대중에게 본보기를 보였을 때이다. 1997년 1월 파업 직후 민주노총은 여론 조사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 1위로 꼽혔다. 2013년 말 철도파업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의 초점을 제공하는 듯했을 때도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이 갑자기 높아졌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초기에 그 운동이 확대되도록 조직노동자들(특히 공공부문과 철도 파업)이 크게 기여했을 때도 그랬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운동을 배신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하는 지금, 민주노총이 그에 맞서 불만의 초점을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투쟁해야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일면 협력하면서 촛불 원원에 훨씬 못 미치는 후퇴에 합의해 준다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개선 문제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안정유연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단협 있는 사업장은 안전지대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 가령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경사노위에서 합의되면 근로기준법이 개악돼 노동 현장에 적용된다. 또, 사용자 대항권이 일부 합의되면, 점거 파업이 금지되고 정부가 파업 찬반투표에 간섭을 강화하는 등 단체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임금 관련 논의도 마찬가지다.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정규직 임금 양보가 일단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기 시작되면, 즉시 현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제도와 법률이 개악된다고 투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런 개악을 방치하면 안 된다. 특히, 이런 개악이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의 합의로

이뤄지면, 그에 맞선 기층 투쟁은 정당성을 의심받아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아무 방아막 없이 개악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사실, 경사노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노동자의 조건과 저항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가령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45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중재한 안은 결국 자회사 채용을 수용하고 나중에 고용과 처우

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런 개악을 방치하면 안 된다. 특히, 이런 개악이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의 합의로

조건부 참여는 관찮지 않나

주요 개악 점성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그동안 충분히 확인됐다.

지난 수개월 동안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 등이 사회적 대화 참여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보란듯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개악을 거듭해 왔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

도 하지 않았다.

전제조건이 거둬 무시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단호한 대응은 회피한 채, 조건 제시를 반복하면 민주노총과 노동계급의 처지만 우스워진다. 또한 조건부 참여론은 지도부가 싸우겠다는 것인지 경사노위에 들어가려는 것인지 모호해서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참여 않는다면 대안은 뭔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협을 통해 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전략은 실제로는 비현실적이다. 촛불운동의 진보 원인을 이루려면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경사노위 불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투쟁을 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사노위 바깥에서 뒤틀리고 있다면 사회적 대화를 내세운 개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투쟁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2016년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괜찮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투쟁에 나섰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가세했다. 오히려 김명환 위원장 자신을 비롯한 상층 지도자들이 대화에 미련을 두고 개별 투쟁들을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시키기를 주저한 것이 문제였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노동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그 때문에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현장 분위기도 빠르게 부정적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변화를 읽고, 투쟁 기회를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자 우파

가 사기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애초 문재인 지지를 하락이 진보 원인을 저버린 탓임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중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일 뿐이다.

연서명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과 대정부 투쟁 결의 연서명
 에 동참해 주십시오

<http://bit.ly/경사노위참여반대>

※ 민주노총 대의원·현장간부(와 조합원) 연명을 받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 발표합니다. 연명 마감은 1월 26일(월) 저녁 6시까지입니다.

노란 조끼 운동

프랑스를 뒤흔든 10주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10주 동안 시위, 도로 봉쇄, 경찰 폭력에 맞선 전투 후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찰리 김버가 노란 조끼 운동이 보여 주는 바를 살펴보고, 승리의 방법을 묻는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극심한 계급적 불만이 어떻게 침울한 수동성을 비범한 항쟁으로 급속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마크롱을 지지하는 기업들에 맞선 고무적 도전이 10주 동안 계속됐다.

마크롱은 2017년 취임하며 파업이나 시위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마크롱은 프랑스 노동자와 연금 생활자들이 자본주의 하의 냉혹한 현실을 결국에는 수용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운동의 분노와 굳건함에 밀린 마크롱은 굴욕적으로 양보해야 했다.

2018년 11월 17일 28만 명이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도로를 봉쇄하면서 노란 조끼 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정치적 지진이었고, [이 지진의 충격파는] ‘사람들은 싸울 수 없다’거나 ‘사회적 불만은 언제나 우파들에게 득이 된다’는 등의 안일한 편견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파리의 몇몇 명품 상점들이 약탈당했고, 프랑스 대부분의 도시 중심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개선문에서 가까운 파리 8구의 구청장 잔느 도트세르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는 내전 중입니다. 내 평생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빈곤, 저임금, 불평등 문제를 전국적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부자와 정치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오만함과 경멸에 대한 격렬한 분노의 초점 구실을 했다.

수십 년간 쌓여 온 분노가 배출구를 찾았고, 엘리트들은 겁에 질렸다.

12월 10일에 마크롱이 양보한 후, 프랑스 판 전경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150억 유로가 큰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 평화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쓸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레닌을 인용해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언제나 대중보다 한 발짝 앞서 있어야만 합니다.”

양보

하지만 대중이 그보다 앞서 있었다. 마크롱이 양보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썩어 빠진 마크롱 정부가 더 양보하도록 몰아붙일 수 있고, 양보하지 않으면 항쟁으로 퇴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됐다.

보통 때라면 불만스러워도 무력함만을 느꼈을 문제들에 대해 집단적 행동이 벌어졌다. 프랑스 북부 도시 릴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텔레비전에 대고 소리치는 것으로 매일 저녁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함께하면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루아레주(州) 사랑에 있는 아마존 창고에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출처: Christophe Becker(블라카)

정부와 기업들에게 강편치를 날리다 1월 12일 “9차 행동”

팔리지 않은 상품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한 무리의 노란 조끼 시위대가 창고 앞 도로를 봉쇄했다.

시위대는 창고를 드나드는 통행을 사실상 전면 통제했다. 아마존 임원들은 지난 아홉 달 동안 상품 29만 3000개를 폐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 약속을 해야만 했다.

노란 조끼 운동의 특징과 도전적 측면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매주 토요일 거리 시위에서다.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의 진정한 기반은 도로·요금소·교차로 봉쇄, 지역 집회, 수백 명이 모여 요구안에 대해 토론하는 지역 총회이다.

노란 조끼 운동은 노동자,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연금 생활자, 학생들을 한데 모았다. 운동은 창의성과 사회적 교류를 고무했고,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때문이라는 생각을 퍼뜨렸다.

극우파가 노란 조끼 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운동 안에 극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의 전반적 추세는 왼쪽을 향하고 있다. <르몽드>가 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5퍼센트도 안 됐다.

<채널2 TV>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의 33퍼센트는 자신을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고 답했다. 약 15퍼센트는 자신을 극좌파라고 말한 반면, 자신을 극우파라고 답한 사람은 5.4퍼센트였다.

노란 조끼 운동 안에서는 파시스트들을 쫓아내는 의식적 과정이 있었다.

1월 5일 보르도에서 열린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활동가들을

완력을 써서 시위에서 쫓아냈다. 나치 단체 ‘악시옹프랑세즈’ 회원이라고 알려진 활동가들과 극우 성향 청년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시위에서 쫓겨났다.

파리에서는 인종차별·성차별·성소수자 혐오 구호를 외친 극우 성향 학생 단체 ‘그루프위니옹데팡스’ 회원들이 노란 조끼 집회에서 쫓겨났다.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에서 온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 셸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정의, 더 나은 임금과 연금을 위한 투쟁을 파시스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곳곳에서 주장을 펴고 여러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때로는 투쟁 자체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프랑스 북서부 도시 캥에서는 국가 탄압 때문에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노란 조끼 시위대를 환영한 것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지내던 이주민들뿐이었다.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400명 규모의 노란 조끼 집회가 미등록 이주민 200명이 사는 창고에서 열렸다. 운동 내 우파는 이를 싫어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민이 자신들의 동맹이라는 것을 배웠다.

많은 노란 조끼 참가자들이 경찰에 느끼는 증오도 커졌다.

정부는 일반 경찰, 시위 진압 전문 부대인 공화국수비대(CRS), 경찰 완장을 차고 마스크를 쓴 수상쩍은 자들까지 모두 동원했다. 이들은 모두 때를 지어 거리를 누비며 평화적 시위를 공격했다.

노란 조끼 시위에 맞서 주말마다 최대 8만 명의 국가 폭력배들이 동원되는데, 이들은 장갑차와 모든 현대적 탄압 기술의 지원을 받는다.

그들은 으레 최루가스, 섬광 수류탄, 특수한 총기로 발사하는 고무탄 “플래시볼”을 사용한다. 80세 노인 지네브 로두앵이 마르세유에서 경찰 최루탄을 얼굴에 맞아 사망했다.

최루탄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심하게 다쳤다. 경찰 폭력을 기록한 웹사이트 ‘데자르몽-레!’(저들을 무장 해제시켜라!)에 따르면, 4명이 최루탄에 맞아 손을 잃었고 17명이 실명했다. 수십 명이 발을 잃었고, 얼굴이 짓이겨졌으며 턱뼈가 부서졌다.

약 5000명이 체포됐다. 1월 17일, ‘노란 조끼 시위대가 포르 라 누벨의 정유소를 봉쇄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썼다는 이유로 28세 청년 에디 마르랭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마크롱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거리에서 떠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실패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스스로를 방어하며 값진 교훈을 많이 배웠다. 마르세유에서 온 공장 노동자 알린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경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 공격받을 때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

다. “저는 노란 조끼 시위에 8주 동안 참가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찰이 부자들, 교만한 인간들,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노를 느꼈다가, 겁먹었다가, [이제는] 우리의 힘은 함께할 때 나온다고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전직 프로 권투 선수] 크리스토프 데팅저가 경찰과 싸우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데팅저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데팅저가 경찰들을 모조리 때려 눕히

길 원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이제 만약 주택 단지에서 청소년들이 경찰과 맞붙으면, 저는 청소년들이 무사하길 빌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노란 조끼 운동에 참가하며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여성들, 특히 한부모 여성들이 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남부 오토가론주(州)에서 온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이자 한부모 여성인 레티시아는, 자신의 생활 조건 때문에 억눌려 온 분노를 어떻게 노란 조끼 운동으로 표출할 수 있었는지 썼다. “이 노란 조끼를 입으면 좋은 이불을 덮는 것보다 더 따뜻합니다.”

운동에서는 민주주의 실험도 벌어지고 있다. 10여 군데 도시에서 시위 계획을 조율하고 다음 목표를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총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프랑스 북서부 도시 렌 인근에서는 한 달 동안 “노란 토끼”(“빨리 뛰는 노란 조끼”)라는 단체가 꾸준히 모임을 열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세금, 불평등, 경찰 폭력, 1968년 항쟁 등을 토론한다.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은 여전히 중요한 약점이 있다. 운동은 아직 마크롱을 패퇴시킬 만큼 크지는 않다. 노란 조끼 운동은 훨씬 더 투쟁적이지만, 참가자 규모만 보면 지난해 노동조합들이 이끈 시위들보다 작다.

운동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파업과 점거 같은 일터에서의 행동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층 조합원들과는 달리 CGT 지도부는 노란 조끼 운동과 거리를 둔다

오늘날의 노동조합 지도자들, 정당, 항쟁

노란 조끼 운동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기성 정당들과 노동조합의 특정 측면들에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놀랄 일은 아니다.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란 조끼 운동을 모욕해 왔다.

두 번째로 큰 노조연맹인 프랑스민주노동자총연맹(CFDT) 위원장 로랑 베르제는 노란 조끼 운동이 “전체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최대 노조연맹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마지못해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에 공감해 표했다.

하지만 CGT 지도부는 극우와 함께 행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동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졸권 말해 왔다. 그 대신 그들은 대체로 효과가 없던 행동의 날 집회를 호소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해 온 바로 그 전략 말이다.

노동조합이 노란 조끼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몇몇 우파 인사들은 우려를 한다.

보수 언론 <르피가로>는 12월에 이렇게 썼다. “한 세기 동안 CGT는 대중적 불만의 통로 구실을 했다. 노란 조끼 위기는 [CGT의] ‘전문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보여 줬다. 또 노동조합의 전반적 위기가 얼마나 문제적인지도 보여 줬다.”

몇몇 기업주들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통해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연계

노동조합 내에서는 지도부가 행동하지 않는 데에 대한 분노가 자라나고 있다. 평조합원 수준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은 노란 조끼 시위대와 연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더 발전시켜야 한다.

CGT는 2월 5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총파업의 요구안은 노란 조끼 운동이 내세운 요구 일부와 유사하다: 세제 개혁,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 집회·시위권리 옹호, 사기업에 대한 국가

의 ‘퍼주기’ 중단 등.

하지만 CGT의 총파업 호소문은 노란 조끼 운동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마크롱은 또다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면피성 행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랄에서 활동하는 CGT 대의원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총파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 파업을 크게 건설하십시오. 하지만 2월 5일은 너무 멍니다. 저는 총파업 날짜가 더 일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파업이 그저 하루 싸우고 다음 날이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면 안 됩니다. 프랑스는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더 대담한 일을 해야 합니다. 기층 노동자들이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싸우고 노란 조끼 운동과 연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몇몇 노조는 2월 5일 이후에도 계속 투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호만 외치는 수준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또 노동자들을 노동조합과 새로운 투쟁으로 한데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반적 교훈도 있다. 노란 조끼 운동 같은 시위가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졌다. 즉,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자동으로 그들이 지도력을 쥐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성 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은 뒤죽박죽이고 모순으로 가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운동에 참가하면서 그 운동이 좌파적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나 기성 정당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란은,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

의 정당이 통제할 때에 견줘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건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노동조합 투쟁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끝장난 것도, 무의미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은, 노동조합 운동에 참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투쟁이 불가능한 이유나 보수당의 지배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는 잘 차려입은 안뽕을 분명히 보여 준다.

노란 조끼 운동이 파업이나 조직 노동자의 힘과 융합되는 것이 사실적이라는 말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정반대를 뜻한다. 노란 조끼 운동이 노동자들의 힘과 연결되도록 하되,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믿지 말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혁명가는 누구든 노동당을 진중하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항쟁이 노동당이나 의회로 대표된다는 주장은 노란 조끼 운동이 주는 영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과 제러미 코빈이 해협 너머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영국에서 노란 조끼 운동같은 폭발적 사회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운동은 많은 복잡한 특징을 띠 것이다. 지금 영국에서 누가 [노란 조끼] 운동의 진정한 정신을 대변하는지를 두고 파시스트들과 벌이고 있는 전투는, 앞서 말한 복잡성이 축소판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노란 조끼 운동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영국에서도 그런 대중 항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638호
번역 김동욱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김인식

4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 곳에서 치러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두 곳이 더 늘 수 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군현 한국당 의원이 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2016년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잃었다.

창원 성산구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드루킹 특검이 노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하자, 노 전 의원이 비극적 선택을 하면서 치러지는 보궐 선거다.

창원 성산구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배신이 촉진하는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민주당 후보(권민호)는 얼마 전까지 한국당 소속으로 거제시장을 지낸 자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하자 민주당으로 갈아탄 기회주의자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협공에 납작 눌러 지지율이 저조하다.

오른쪽에서는 한국당 후보(강기훈)가 현재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자는 박근혜 석방 운동을 지지하는 반동적 정치인이다.

왼쪽에는 노동계 후보들이 있다. 중요한 노동계급 지구에서 노동계 후보가 자본가 정당들의 후보를 패퇴시킨다면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노동계 후보의 당선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가늠해 볼 의미 있는 정치적 척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창원 성산구 선거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원내 진보 정당인 정의당(여영국)과 민중당(손석형)이 각각 후보를 냈다. 두당은 이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보 단일화 규칙 마련을 위한 양당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양당의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측은 민주당이 빠진 양당만의 후보 단일화는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에 밀리는 민중당 측은 (창원 성산구 거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단일화하자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번 보궐 선거 결과가 1년 뒤인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 테이블 마련 자체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당의 후보 중 누가 더 잘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지금으로서는 두 후보의 정치적 우열을 가르기가 난감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단 두 후보들의 정치 이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동운동가에서 진보 정치인으로

두 후보는 모두 노동운동가 출신의 진보 정치인이다.

여영국 후보는 1980년대 후반에 마창노련(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의 노동운동가였다. 그 뒤 진보 정치인이 됐다. 민주노동당에 참여했다가 2008년 분당 때는 진보신당(과 노동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2015년 노동·정치·연대가 정의당과 통합할 때 정의당에 합류했다. 그는 2010년과 2014년 (각각 진보신당과 노동당 소속으로) 경남도의회에 당선했다.

손석형 후보는 1980년대 마창노련에서 활동했고,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손 후보도 민주노동당에 참여했다가 그 뒤 통합진보당을 거쳐 현재 민중당 당원이다. 그는 2008년과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경남도의원에 당선했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앞서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선거 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후광이 큰 듯하다. 지역 사정을 아는 한 활동가는, 지지정당을 떠나 노 전 의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지역 분위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이력이 그렇고, 정의당과 민중당도 모두 해당 지역 노동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의당은 금속과 공공에서, 민중당은 학교 비정규직들 사이에서 지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급 이익 굳건하게 대변해야

이것은 이 지역의 계급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창원 성산구는 울산 북구·동구처럼 노동계급 밀집 지구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마창노련이 주도한 전투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이곳에서 출마하자 노동자들이 대거 선거 운동에 동참했다. 권영길 의원은 2004년과 2008년 연거푸 이곳에서 당선했다.

2016년 노회찬 전 의원이 당선할 때도 노동자들이 선거 운동의 중추 구실을 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창원 성산구를 전략 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노동자 후보 대 자본가 후보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노동자들의 계급 투표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노동계 후보들은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진지하게 대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정의당 리더들이 “진보·개혁 진영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진보 측의 친구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혁 배신 세력이자, “진보·개혁” 세력이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하더라도 이런 제후에는 너무 진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에 동맹을 제의할 것이 아니라 그 당(과 정부)과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한다.

당장 조선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경남에는 조선소들이 몰려 있다.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도 위기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관된 노동계 후보라면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 공간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노동계급 공격을 유보없이 폭로하고 노동계급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해야 한다. 당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 운동 강화와 더한층 진보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

